



#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0(24-6) | 2024. 6. 3

진정한 호국보훈의 길은 '자유민주통일'이다

문성묵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및 제언

윤진영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영석

## 진정한 호국보훈의 길은 '자유민주통일'이다

### 문 성 묵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護國)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다. 보훈(報勳)이란 '공로나 세운 업적을 갚는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호국보훈(護國報勳)이라함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지킨 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보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정신을 확산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고양하는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호국보훈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을 실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호국 영웅들을 진정으로 모시는 조치들을 추진해왔다. 특히나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이희완 예비역 해군대령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보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 창설행사에 2년 연속 참석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을 이용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노골화하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 등 연일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호국보훈의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도달한 결론은 바로 ‘자유민주 통일’이다. 왜 그런 것일까?

### 진정한 ‘호국’을 위해 자유민주 통일로 北 위협을 소멸시켜야 하기 때문.

호국의 다른 표현은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한다.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런 힘이 부족해 수 많은 외침을 당했다.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의 한계로 마냥 군사력을 증강할 수 없다. 그러기에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강력한 힘을 보유한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세계 최강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 6·25 전쟁은 불행한 역사였지만, 한미동맹을 맺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동맹 체결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적 역할은 다큐영화 ‘건국전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직접 확인했다. 2년여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받았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 전쟁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국이었다면 감히 러시아는 침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힘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중립국 지위를 누려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 그런데 강력한 힘을 구비하는 노력과 함께 필요한 것은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 위협요인은 바로 북한이다. 통일은 위협요인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진정한 호국의 길은 곧 위협의 주요인인 북한 정권을 소멸시키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 진정한 ‘보훈’이란, ‘통일 대한민국’ 유훈(遺訓)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는 진정 무엇을 원하셨을까?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회복, 그리고 진정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분들의 나라 사랑의 희생정신과 그 실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1948년 건국 당시 거의 꼴찌 수준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돕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워(GF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군사력 평가지수는 조사대상 145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36위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한반도의 절반만 자유를 누리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기미 독립선언에서 우리 조상들이 주

창한 자유주의 기반은 인권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기미독립운동, 즉 3·1운동의 완성은 바로 자유 통일이라는 점을 주창했다.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명시된 우리 영토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진정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인권을 누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3·1운동의 완성인 동시에 광복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민주 통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훈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 할 것이다.

향군은 진정한 ‘호국보훈’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중심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보훈의 대표단체인 향군이 자유 민주 통일을 주도하는 데 앞장서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더욱 빛나게 하자!!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및 제언

윤진영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군의 허리라 불리는 초급간부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초급간부 문제의 심각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초급간부 지원율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학군과 학사장교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원율 또한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육군 학군장교 지원율 4.5대1(2014) → 2.8대1(2020))이다. 둘째, 부사관 충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5년간 평균 육군 86.7%, 해병대 70.8%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지속적인 초급간부 관련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넷째, 상급자와 병사들 사이에 끼인 존재인 초급간부들의 위치에 대한 고민도 초급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다. 다섯째,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격한 봉급 인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간부들의 지원율이 해가 갈수록 더욱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초급간부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비해 부족한 지원과 교육으로 완벽한 임무수행에도 일부 미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수 인재의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단기 복무제도 개선방안 (인력 구조 개편과 연계, 적정 보수 구조, 전역 후 사회 진출 연계 등), 초급간부 리더십-팔로우십 함양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 (Z세대 수용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 마련), 초급간부의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 및 여건 개선방안 (휴가 및 연가 보상, 재택근무, 조직 문화 등 다면 접근), 현실에 맞는 처우 개선방안 등을 국방부 자체적인 개선방안과 외부 기관의 연구용역 의뢰 등으로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필자는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5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제도적 차원은 임용방식과 복무기간,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관련 제도, ②경제적 차원은 급여와 각종 수당, 그리고 주거 여건 등 물질적 지원, ③관계적 차원은 상급자와 부하들과의 관계, ④조직적 차원은 직무수행 방식, 환경 문화 등의 개선, ⑤교육적 차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자기개발 관련 교육 등 이다.

## 1.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

기존의 계급 중심 관리에서 총원 기반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임용자들은 장기복무 대상자로 임용하되, 승진기회의 균형과 더불어 승진시기, 수준 높은 자격심사를 통해 질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초급간부 복무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정적으로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방출의 악순환을 끊고 소수획득-장기활용-소수방출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다.

장기복무 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이 가져올 공황 수준의 지원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4개월의 단축을 흡수할 수 있는 양성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일인데, 후보생 기간에 비어 있는 두 번의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초군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임관 전에 초군반 교육을 끝냄으로써 4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제도적 개선방안의 핵심은 역시 장기복무 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방출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소소한 지원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으로 지원 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2. 경제적 차원의 개선방안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명분을 획득하면 급속히 추진되는 측면에서 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 그러나 예산획득이 어렵다고 언제까지 외부환경 요인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효과가 높고, 명분도 있다면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명분을 축적하고 매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살라미 전략’이 필요하다.

수당은 합리성과 공정성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급간부들이 분노하는 것은 수당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당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당직근무비나 초과근무수당이 대표적인 불만 요소이다.

주거 문제는 의식주 보장이라는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초급간부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군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체의 약 30% 수준인 30년 이상 노후화된 숙소는 전면 개수되어야 하고, Z세대 생활환경을 고려한 간부 숙소로 개선 및 신축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노후화된 숙소를 사용하는 간부들이 자기 집 수리하듯 숙소를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신속한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 3. 관계적 차원의 개선방안

사람들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의 구조, 문화, 제도가 영켜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인 세대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서로 입장과 처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초급간부와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세대적 차이가 문제가 되겠지만, 병사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상급자나 병사들과의 소통 관련 교육도 이와 비슷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초급간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개별적이기 때문에 보편적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당장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조직 내 관계망에 대한 조사와 연구다. 군 조직 내 관계망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주기적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문제를 식별할 수 있어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없이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4. 조직적 차원의 개선방안

합리적인 조직운영에는 첫째, 불합리한 근무관행의 합리적 조정, 둘째, 연가 사용 완전 보장, 셋째, 야근 및 주말근무 대폭 축소 등이 포함된다.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은 Z세대가 기피하는 직장의 근무행태들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간부들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관행적인 근무행태에서 벗어나 근무시간에는 충실하고, 그 이외 개인 시간은 완전히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합리적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관련 다면평가의 확대는 상관과 지휘관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수평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수직적 위계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360도 다면평가를 확대, 강화한다면 초급간부들의 존재감도 신장될 수 있고, 수평적 소통에 필요한 구조적인 여건도 조성될 것이다.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로서 활용됨으로써 부대 내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교육적 차원의 개선방안

현재 양성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대 배치 후 양성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부대 임무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부대별로 교육수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을 표준화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초급간부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초급간부로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리더십 교육, 의사소통 능력, 임무형 지휘에 필요한 실무 역량의 강화이다. 이러한 교육은 단기간에 높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 또한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 형식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충분히 교육된다면 초급간부가 자대배치 후 자신감을 갖고 지휘통솔 및 부대관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육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개선내용이다.

교육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감정코칭, 거꾸로 수업, 게이미케이션, 실습 및 체험, AI 기반 VR/AR, 상호토론 등은 Z세대로서 초급간부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하여 교육 목표 도달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초급간부의 역량 함양을 위해 양질의 교육 내용과 적합한 교육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고도 유용한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초급간부의 자기개발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에 있어 일과 후 및 주말 시간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개선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명확한 추진 주체의 설정, 둘째, 시급함과 중요성의 조정, 셋째, 하위 조직의 자율성 발휘, 넷째, 소통하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방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자율성을 발휘할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초급간부들이 자신들의 복무여건에 불만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불만이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는 것만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문제 제기가 전달되고, 적당한 시간과 방식으로 해명되는 것만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낀다. 소통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소통을 통해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출신별 진출률의 공정함,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직장을 만든다는 생각을 공유한다면, 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영 석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국의병연구소 소장)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제정된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호국보훈과 관련된 6월의 주요 행사와 우리 국민의 각오에 대해 궁구(窮究)하고자 한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 제정이다.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이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된 군사원호청(1962년에 원호처로 승격)이 1985년 국가보훈처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업적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되었다.

'호국보훈의 달'에 대한 대부분 의견은 1952년의 '군경원호강조기간'으로 보고 있다. 6·25전쟁에서 희생된 분들과 상이군인을 돕기 위해 '군경원호강조기간'이 6월로 정해졌는데, 원호처 설립 이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1년에 설립된 군사원호청이 1984년 12월 31일 국가보훈처로 개칭되면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다.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한 것은 의병의 날, 현충일, 6·10만세운동 기념일, 6·25전쟁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 6월의 주요 기념일과 의미

먼저 의병의 날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다. 1982년 10월 19일 안호상 의병기념사업회장 등은 4월 22일을 '의병의 날' 제정을 국회 등에 청원했다.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에 맞추어 '의병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광재우가 경남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임진 의병의 시초(始初)가 된 4월 22일로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008년 8월 의령군수 등 1만 5,586명이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여 2010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임진왜란 시 광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1592년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호국보훈의 달 첫째 날인 6월 1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이날은 말 그대로 ‘충렬(忠烈)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가 추념일일 뿐 국경일이 아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불리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1956년 4월 25일 국방부령으로 공포된 ‘현충 기념일에 관한 건’으로 ‘현충기념일’이라고 불리다가, 1982년에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념일로 되었다. 국립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추념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분간 우리나라의 번영과 독립,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머리 숙여 추모하는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제정 당시 언론 보도는 물론, 국무회의 기록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밝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보훈부나 국가기록원 등에서는 현충일의 유래로 망종(芒種)을 주장한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 망종을 중시했고, 고려 시대부터 망종에 사망한 군사를 추모했다는 것 때문에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없다.

셋째, 6월 10일은 6·10 만세운동 기념일이다. 1926년 4월 26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승하하면서 조선 왕실의 역사는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황제의 죽음을 슬퍼했다. 조선인들의 항일 집회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일본 경찰들이 강제로 이들을 해산시켰고, 일본 제국은 영친왕을 이왕(李王)으로 봉하고 항일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애국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인을 규합하여 순종의 장례식인 6월 10일에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926년 6월 10일 오전 8시 30분 일본 경찰, 헌병 외 5천 명의 보병, 기마병, 포병 등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으나 당시 23세였던 이선호의 ‘대한독립만세’ 선창에 따라 중앙고보생 100여 명이 만세를 제창하고 격문 1천 장을 살포하며 태극기를 휘날리며 단성사 앞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였다. 관수교 부근에 도열해 있던 보성전문 학생들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전단을 뿌렸다. 맞은 편에 있던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또한 만세를 부르며 격문을 살포하였다. 시위는 점점 확대되었다.

결국 일본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200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을 체포했으며 일제 경찰은 추가로 계속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였다. 학생들은 6·10 만세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독자적인 운동 주체로 부상하였고 이는 3년 뒤인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넷째,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일이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이다.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여 대규모 전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휴전 이후로도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산·반공 양강 진영으로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로, 냉전인 동시에 실전이었으며, 국부전이면서 전면전의 복잡한 양상이었다. 이는 유엔군을 비롯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까지 관여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이었다.

1951년 6월 23일 첫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전쟁포로 송환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휴전 상황이나 대치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6월 15일은 제1연평해전이 발발한 날이다. 1999년 6월 15일 오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우리 해군의 고속정이 선체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북한은 1999년 6월 7일부터 9일간 약 11회에 걸쳐 우리 해역을 침범하였다. 6월 15일에는 북한 함정 10척이 소총 사격과 함께 25mm 기관포를 발사하며 우리 함정을 공격했다. 이에 우리 해군은 40mm와 76mm 기관포로 응사하여 14분 만에 북한 함정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를 제1연평해전이라고 한다. 전투 결과 우리 해군의 사기와 전투 능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한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여섯째,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날이다.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의 마지막 날인 하루 전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 우리의 각오를 다지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호국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들의 각오를 단단히 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 1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단정하면서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안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우러러볼 수 있게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

셋째, 제복 입은 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최근에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훈훈한 사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뽐”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국민 총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국론분열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